

經營情報共有와 企業效率性*

朴 榮 基**

〈目 次〉	
I. 問題의 提起	V. 規制方式의 變化
II. 사회시스템과 그 限界	VI. 市場經濟秩序의 限界
III. 사회시스템의 適應力	VII. 市場機能과 過剩生產
IV. 世界化와 사회시스템	VIII. 맷는말

I. 問題의 提起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구제금융 그리고 정부수립 이래 처음 실현된 수평적 정권교체는 향후 우리사회 전반에 그리고 특히 생산과 연관된 사회시스템(social system of production, SSP)에도 큰 변화를 예상케 한다.¹⁾ 비록 구제금융으로 인한 특이한 경우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의 국정운영방식이나 정부의사결정과 판이한 노사정 위원회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은 이같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경제의 향후 운영방식이나 고용관행의 향방마저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

사회개혁시도는 그간에도 물론 수없이 이어져 왔다. 역대정권마다 집권초에는 개혁정책을 거론하는 것이 관례이었기 때문이다. 계속 개발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교육수준의 급상승 그리고 기본권 보장과 자율을 내세우는 기업구성원의 급격한 의식변화 등은 정부로 하여금 기업운영방식의 끊임없는 개혁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또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새로운 정책이 강구된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사결정에 종업원의 의견반영을 의무화 한 노사협의제도(1980년 노사협의회법), 그리고 개별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1996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촉진법) 등은 모두가 이같은 정책의 구체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기금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적 결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³⁾

한편 이같은 거시정책상의 정부시책과는 달리 개별기업수준에서도 그간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많은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었다. 특히 제조업일 경우 거의 예외없이 활용되는 이른바 품질관리조(Quality Circle, QC), 모든 작업공정과 의사결정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TQM(Total Quality Management), 그리고 직무수행과 연관된 의사결정에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 개선운동 등은 모두가 그간 기업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경영기법이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그간의 기업내외 시책이 어디까지나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앞서 지적한 “사회적 대타협”은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 방식이어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즉 종업원은 기왕의 방식에 따라 기업의사결정에 다만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도입이나 규정제정에도 참여하는 진취적인 방안이어서 지금까지의 참여방식과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하며, 종업원경영참여제도의 틀마저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기존제도의 실상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참여방식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과제다. 더구나 그간 도입된 제도가 당초의 기대에 미흡하였다면 실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새로운 전략강구에 앞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생산과 연관된 사회시스템(SSP), 특히 경영의사결정에 종업원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주로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 첫째는 생산과 연관된 사회시스템에 종업원의 참여가 왜 증대되며, 오늘의 사회환경하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회시스템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둘째, 시장경제질서의 역사적 시축 위에 오늘의 시스템은 어떤 자리매김이 가능하며, 또 어떤 유형으로 진전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을 이같이 거시적 시각에서 새삼 검토하는 이유는 기업성과란 특정제도나 전략 못지 않게 관리자가 기업환경 특히 환경변화를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망하며,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이 어떻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종업원의 작업의욕이 어느정도 그리고 어떻게 제고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제주체 모두 기업내외 변화를 두루 파악하고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때 가장 통찰력있는 투자가로 거론되던 루사(Robert Roosa)는 미국의 유수한 최고경영자(CEO) 중에서도 기업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망하는 사람은 10여명도 안될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는데, 이같이 기업인의 통찰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후 기업환경이 한층 급변하였음을 감안할 때 오늘의 의사결정자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한 속에서 기업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⁵⁾

한편 대다수 서구의 관리자들은 우리와 달리 기업의사를 비교적 짧은 시간대 위에서 결정하며 특히 미국기업의 경우 계획시간대는 3-5년이 통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이같이 짧은 시간대 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날로 새로워지는 테크놀로지나 생산공정은 접어 두고라도 기업활동을 좌우하는 자본이 우선 수많은 국제화된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경영이나 전체사회의 혁신패턴(evolutionary pattern) 또한 예측불가능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기 2000년이라는 새로운 1000년(millenium)을 눈앞에 둔 우리는 저마다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⁷⁾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경제질서가 시장경제의 역사적 시축 위 과연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지 새삼 확인하고, 기업의사가 왜 그같이 결정되는지, 바꾸어 말하여 기업의사결정을 제약 또는 구속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장경제의 역사적 시축위에 오늘의 경제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 위상을 새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회시스템의 향방을 전망함으로써 거꾸로 지금의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이 글에서는 종업원의 경영참여제도만을 분석하기보다는 기업전략결정이나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친, 그리고 계속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경영전략이든 그 성과는 전체 경제시스템을 좌우하는 보다 광범한 역사적 힘(forces)에 의해 가름되는 것이고 보면 이들 전체환경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강구야 말로 해당경영전략에 대한 분석보다도 한층 효율성제고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사회시스템과 그 限界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고용과 연관된 정부정책, 사회체

도 그리고 가치관 등 기업환경 모두가 나라마다 다르며, 또 이를 상이한 기업환경 모두가 기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저마다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관리방식이나 관행을 도입 또는 모방하지만 모방된 방식이나 관행의 효용성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특정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기구나 정책만이 아니라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 그리고 기업환경전체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불가피하게 된다.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비록 경쟁력있는 새로운 관리방식이나 노동관행을 도입해도 환경요인으로 인해 그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에는 각기 생산가능한 제품이 있고 세계시장에서 그같은 사회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경쟁 할 수 있는 제품유형도 다를 것이고 보면 모방된 시스템의 효용성은 나라마다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⁸⁾

이같이 상이한 생산의 사회시스템도 장기적으로는 수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convergency theory). 수렴되는 이유는 비록 나라마다 사회시스템은 각기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조성되지만 그리고 상이한 문화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며, 정치적 보호막으로도 작용하지만 이를 모든 문화는 공업화와 더불어 동일한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되는 이른바 공업문화(industrialism)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⁹⁾ 그러나 공업문화가 기반이 되어 유사한 시스템으로 수렴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구와 제도는 모두 서로 연계된 것이고 보면 변화의 내용이나 방향에는 나라마다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나라마다 복잡한 사회제도가 모두 같은 유형으로 수렴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어느 사회이든 법이 있고, 또 법은 현행제도나 기구의 계속성과 일관성 보장이라는 이른바 질서유지가 목표이고 보면 법과 질서유지 때문에 사회시스템의 수렴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구는 저마다 그 구성체 - 인적·물적자원 - 가 고리가 되어 여타 기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체 모두가 변화하지 않는 한 모든 시스템이 같은 모습으로 수렴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규범과 도덕, 특이한 행동양식, 관습, 그리고 정의(justice)에 대한 각기 다른 믿음이 있고, 또 이를 상이한 가치를 기반으로 비로소 기구는 정체성(identity)을 지니는 것이고 보면, 정체성마저 접어둔 채 모든 기구가 하나의 모습으로 수렴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¹⁰⁾ 한편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의 특성은 생성초기의 상태와 기반여하에 따라서도 좌우되는 데 생성초기의 특성이 다른 사회시스템이 관행상 같은 모습으로 동화될 것으로는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비록 제도적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가

변하더라도 사회시스템은 한동안 계속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¹¹⁾ 그러나 시스템이 수렴되기 보다 계속성을 지닌다 하여 이를 곧 모든 시스템이 예정된 경로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라마다 기업발전과정에는 결정적 계기를 수없이 겪게되고 또 각기 이를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제도나 기구의 내용은 변하기 때문이다. 사회시스템은 그 와중에서도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때까지 계속성이 유지되어 왔을 뿐이다.¹²⁾

요컨대 새로운 관리방식이나 기업관행은 경로의존성(path embeddedness), 기구구성 그리고 연관된 제도와의 관계여하에 따라 그 효율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나 관행도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어느 사회이든 제도나 기구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해당제도나 기구의 효율성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같은 과정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는 가장 일반적 경로로 거론되고 있다.¹³⁾ 그간 강대국이 소멸한 가장 큰 원인은 기존제도나 관행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있는 기구나 제도적조치(institutional arrangements)를 모방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과정에서 법의 역할이 중요한데, 법은 그 속성상 흔히 지도층의 이해와 부합되기 때문에 법의 준수와 이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질서유지를 사회지도층은 특히 강조하게 되며, 또 이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사회제도의 결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사회지도층이 외면하거나 간과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시스템의 수렴을 한층 어렵게 한다.¹⁴⁾

사회시스템의 변화는 수렴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보다 큰 제도에 통합된다는 이론도 있다(synthesis theory). 예컨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발족과 함께 서유럽 모든 나라가 EU라는 보다 큰 제도에 통합되고, 이와 함께 이들 국가의 사회 및 정치제도상 특성도 소멸되며, 이 과정에서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도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보다 큰 시스템을 조성하는 하위시스템이 비록 독립된 시스템으로 각기 다른 변화를 보이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가장 좋은 관행이나 형태로 통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는 설명이다.¹⁵⁾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들 이론은 모두가 언제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언제나 우수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구성요소가 어느 시스템에 비해서도 우수해야 가능한데

항시 수월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성요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생산량과 무관하게 생산비용은 언제나 저렴해야 하며, 동일한 시설과 기술로 다양한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비용 없이도 개선된 테크놀로지를 언제나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절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시스템의 수월성은 생산방법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 그리고 그 같은 시스템이 자리잡은 환경여하에도 영향받는 것이고 보면 언제나 우월한 시스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과 연관된 사회시스템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금세기 초이래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위력을 발휘하던 기준화된 대량생산시스템(standardized mass production system, SMPS)에 뒤이을 시스템으로 흔히 다음의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⁶⁾: 즉

① 주문생산(customized production, CP) 시스템

현대사회의 특성인 다양성을 중시하여 생산시설의 평균규모축소와 제품의 질 개선에 치중하는 시스템으로, 경쟁력이 오로지 제품의 질이나 다양성에 좌우된다면 주문생산 시스템은 분명 기준화 된 대량생산시스템(SMPS)에 뒤이을 대표적 시스템이 될 수 있다.

② 다양한 우량품 대량생산(diversified quality mass production, DQMP) 시스템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고려하여 다양성제고와 제품의 질 개선에 치중하는 시스템으로 추가비용 없이 품질향상이나 제품다양화가 가능하고 생산규모(스케일)의 증대와 함께 혜택도 증가된다면 다양한 우량품 대량생산시스템은 주문생산 시스템보다(CP) 한층 우수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이 그 예가 된다.

③ 유연성있는 다원화된 우수제품 대량생산(flexible diversified quality mass production, FDQMP) 시스템

시장변화 그리고 급변하는 테크놀로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DQMP시스템 중 하나의 진전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생산량 그리고 제품의 질에 쉽게 순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장점이다. 따라서 유연성있는 다원화된 우수제품 대량생산시스템(FDQMP)은 개혁이 가능한 조직구조와 충분한 R&D를 위한 투

자자금확보가 수월성유지에 관건이며, 자동차산업에 비해 기술혁신이 한층 중요한 전자소비재산업이 이에 해당된다.¹⁷⁾

④ 유연성/적응력있는 생산(flexible/adaptive production, AP) 시스템

경쟁력은 지속적인 신제품생산능력 여하에 좌우된다는 맥락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다. 이 유형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를 경우 기술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만이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FDQMP 보다 오히려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약(pharmacy)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이에 속하게 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경제하에서 항시 우수한 생산시스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기준화된 대량생산시스템(SMPS)에 뒤이을 시스템이 하나로 수렴된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 이외에도 다음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즉 위의 어느 생산시스템이든 기술이나 제도면에서 반드시 한계가 있고, 또 환경예속논리에 따라 기업환경도 시스템선택이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장속도가 낮고 경제가 안정된 사회라면 소득수준도 낮고, 기술변화도 완만하여 규격화된 대량생산 시스템(SMPS)이 우수한 생산체계가 되고, 이와 반대로 소비자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개성이 강하고 선택적이라면 주문생산 또는 다양화된 우수제품생산 시스템(DQMP)이 불가피하며, 반대로 기술변화가 심해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는 적응력있는 생산시스템(AP)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생산시스템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다. 어느 시스템이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되는 시장구조,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위계질서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시스템의 효율성은 <표 1>이 시사하듯이 각 시스템과 기구간의 조화 여하에도 좌우된다. 예컨대 적응력있는 생산시스템(AP)은 시장변화와 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괄목할 R&D 투자와 잘 개발된 조직시스템이 필요하며,¹⁸⁾ 경제특구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문생산시스템(CP)은 시장과 테크놀로지에 관한 정보공유와 업체간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업자협회가 필요하고,¹⁹⁾ 다원화된 우수제품대량생산시스템(DQMP)은 작업기술(work skill)이 충분해야 비로소 공동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²⁰⁾ 다원화된 유연한 우수제품 대량생산시스템(FDQMP)

도 조정기구를 통해 비로소 모든 테크놀로지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나라마다 경제질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다양한 사회구조가 기반이 되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발전은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과 조정 메카니즘이 이들 사회구조가 조화를 이를 때 비로소 실현된다. 한편 이같은 시스템과 사회구조간 조화의 필요성은 외부로부터 특정 사회시스템을 유입하거나 모방하는데 또 다시 방해가 되며, 또 이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생산의 사회시스템이나 조정메카니즘이 나라마다 같은 모습으로 수렴되는 것을 새삼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표 1〉 사회시스템대안(SSP)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SSP의 특성	생산량	경쟁양식	환경적응력	시장	네트워크	협회	정부
적응생산(AP)	낮음 또는 높음	가격 또는 제품의 질	강함	대응신속	구조적 유연성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정보 풀	경영에 따른 분명한 규칙
주문생산(CP)	낮음	제품의 질	중간 또는 높음	효율적 생산	사용을 통해 기술습득 노동자의 통제하에	질의 기준이나 규칙개발에 도움이 됨	교육 및 훈련에서의 역할
다양한 우수제품 대량생산(DQMP)	높음	제품의 질	중간	높은숙련공에 의한 완벽한 통제	전문지식의 풀인 가능	훈련과 기술 제공에 중요함	기술상의 규범에 대한 실현성
유연한 다원적 우수제품 대량 생산(FDQMP)	높음	제품의 질	강함을 위한 도구	경쟁력측정 분담	R&D위험 불확실성 감소	전략적 투자 우선정책	R&D

III. 사회시스템의 適應力

비록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은 나라마다 같지 않지만 후발공업국의 공업화과정에는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공업화 초기에는 제품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생산이나 외국제품의 국내조립이 허용되고, 또 이 경우 이를 개도국의 인건비는

저렴하다는 것이 유사하다.²¹⁾ 공업화가 진척되어 도약단계(take-off stage)에 이르면 외국기술자가 기술훈련을 주도하고 개도국(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은 엔지니어링이나 연구가 아니라 제한된 부문에서의 제품개발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 또한 유사하다. 그러나 공업화가 보다 진전되면 개도국도 기술과 기초과학이 발전되어 테크놀로지의 개선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초 기술을 제공한 기업들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잠재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도 유사하다.²²⁾

이렇듯 나라마다 적지않은 면에서 유사한 단계를 거쳐 공업화가 추진되지만 그 구체적 과정은 물론 나라마다 같을 수 없다. 각기 다른 제도와 장치, 기구, 법률, 그리고 가치관으로 인해 세부과정에 차이가 있고, 또 그 차이는 교육제도, 기업가정신, 금융기관의 특성 그리고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이다.²³⁾

한편 공업화의 어느 한 시점에서 특정제품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 다른 시기,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제품생산에도 성공한 경우는 아직 예외라는 것이 그간의 경험인데 이같은 현상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즉 이미 보았듯이 그간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기준화된 제품생산 시스템(SMPS)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상승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고품질제품을 선호하게 되자 더 이상 우수한 생산체제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²⁴⁾

기업이 효율성을 잃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사회구성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일 경우 기업의 이같은 효율성상실은 곧 생계를 위협하는 실직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도 변화가 상존하는 전체사회가 기반이고 보면 사회환경변화와 함께 그 효율성을 잃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방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쟁력있는 제도를 수용할 능력이 없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개발 능력을 잃을 경우 앞서 지적하였듯이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같은 현상은 거꾸로 나라마다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출 수 있는 사회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미국의 경우 극도의 개인주의, 강한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하는 정치문화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제도화된 벤처 자본시장(venture capital market), 산학협동을 적극 수용하는 교육기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새로운 산업부문 그리고 유연성 높은 기업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인들은 극심한 개인주

의적인 가치관이나 문화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명한 제품생산도 가능한 수많은 새로운 산업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생명공학부문, 소프트웨어, 연예 및 오락, 그리고 출판 부문 등).

그러나 이를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앞에서 보았듯이 규격화된 제품 대량생산(SMPS)에 성공한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량생산에 성공한 기업이 고도의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수명이 단명한 제품생산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업으로 발전한 경우는 아직 예외로서 흔히는 새로운 벤처기업이 우수업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준화된 제품대량생산(SMPS)에 성공한 기업이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단명한 제품생산에도 성공한다면 이는 대단한 발전유형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같은 현상은 거꾸로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도 결코 정태적이 아니며, 또 거기에는 일정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나 개혁에 따른 독특한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사회시스템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²⁵⁾

IV. 世界化와 사회시스템

기업환경과 연관된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세계화라고 말 할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와 연관된 모든 의사결정을 오로지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냉혹한 현실마저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념이 주도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화는 물론 시작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으나 흔히는 국경의 봉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마치 영세기업이 확산되는 경쟁속에 용해되듯이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도 조만간 세계화로 인해 하나의 모습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같은 인식은 세계화(globalization)되면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세계화되면 가장 좋은 제조업체, 은행, 노조 그리고 심지어 정부도 가장 효율성있는 것만이 살아남게 된다는식의 가정이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돌아켜 보면 이같은 가정이 현실과 거리가 먼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운 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화가 추진된 이래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모든 지역에서 제약없이 활동하는 이른바

초국가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국가기업의 증가가 곧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의 동일화(수렴)나 “규제”방식의 일치를 뜻 할 수는 없다. 세계화는 흔히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즉 ㄱ) 동일한 요소시장 (금융, 자연자원, 그리고 고도의 숙련공)으로의 전환, ㄴ) 외환율이나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든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는 뜻에서의 제품시장의 통합, 그리고 끝으로 ㄷ) 누구나 손쉽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되는 변화 등이다. 그리고 이같은 뜻의 세계화가 실현되면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도 마침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수렴되며, 또 이를 기반으로 누구나 같은 생산성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뜻에서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세계화의 기반인 이같은 가정이 실은 타당성 없는 그리고 실현불가능한 가정이라는 것을 그간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요소시장 중 금융시장일 경우 분명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합되었고 또 세련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각기 다른 경제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쟁력은 세계화 이후에도 나라마다 계속 활용되고 있으며, 또 개별국가의 거시경제정책(macro-economic policies)상 차이와 이로 인한 경쟁력도 염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지역경제로 통합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조차 각 회원국의 실세금리는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통화가 강세인 회원국은 낮은 이자지불을 통해 계속 득을 보고 있으며, 노동력도 일부 무기능 또는 높은 수준의 기술직이나 숙련직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동성이 낮고, 이로 인해 EU 역내에서 조차 투자는 항시 기강이 서고, 숙련공이 많은 일부 저임국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둘째, 경쟁력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지는 분산되지 않고 있으며 또 생산의 사회시스템(SSP)을 통해 얻게 되는 경쟁력으로 인해 같은 제품의 가격차이가 나라마다 오히려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²⁸⁾ 자동차산업이 그 예로서 대기업 그리고 초국가기업(TNCs)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격마저 시장기능이 아니라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이라는 독과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상이며, 또 지난 20년을 되돌아 볼 때 생산비용은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사용 또는 활용해야 비로소 터득이 가능한 노하우(know how)를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사용하기 어렵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도 실은 연관된 과학과 기술면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

만이 이용 또는 차용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정은 어느 사회이든 제도적장치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타국의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을 모방하거나 차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입증하게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도 나라와 경제주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은 수렴되기 보다 오히려 공존할 것이라는 주장이 한층 설득력이 있다. 종업원의 교육훈련방식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즉 일본, 독일 및 스웨덴 등 국가의 종업원 교육훈련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같이 우수하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응방안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다를 수 있고 또 이같이 각기 다른 대응책은 효과적인 사회제도나 규범, 그리고 법의 기반이 되어 서로 다른 사회시스템을 강구하게 된다.

한편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은 사회적 역량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역량은 거꾸로 시스템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독특한 전문화과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산업부문별로도 특이한 사회시스템의 조성을 가능케 하고, 경쟁력 없는 부문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 또는 보상하는 작용도 하게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향후의 국제경제는 국가간 전문화된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이 한동안 공존하리라는 것을 시사하며, 또 이같은 공존은 생산에 따른 각기 다른 사회시스템(SSP)을 통해 가능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²⁹⁾ 그리고 이를 모든 실상은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이 세계수준에서 수렴되기보다는 적어도 한 동안 오히려 이질적인 것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한편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의 조성은 그 특성상 오랜 시간 끝에 소요되며 그 내용도 최신 과학기술이나 생산방식과 달리 정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마련된 시스템은 높은 이자율이나 낙후된 테크놀로지로 인한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으로 인한 취약성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나라마다 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이들 제도나 기구는 경제면에서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있는 것이고 보면 이들 기구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비경제적 성과나 역할도 감안해야 하며 기구 상호간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³⁰⁾ 기구나 제도를 오로지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원리(cost discipline)에 따라 평가하고 또 경제성만을 근거로 그 조성여부가 결정된다면 사회기반조성의 합리적 근거인 보조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에도 위배

되어 전체사회가 자율성이나 창의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맥락에서도 또 다시 사회시스템이 수렴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경제현실은 경제적 효율성 못지 않게 현존하는 모든 제도와 기구의 균형이 유지되어 사회적 긴장이 해소되고 질서가 유지될 때 비로소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수렴론은 또 다시 설득력을 잃게 된다.

V. 規制方式의 變化

세계화와 함께 경제주체간 교류도 급증하였다. 따라서 나라마다 사회발전과정에는 유사한 요소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같은 변화가 사회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각기 어떻게 교류하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기구를 개편하고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조성이나 기구개편을 강요한 그간의 대표적 환경변화는 우선 시장 이데올로기의 급속한 확산, 이로 인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격화, 금융시장의 팔목할 세련화, 그리고 이에 따른 단일정부의 자율성 및 재량권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화는 모두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 위협이 되며, 또 새로운 제도의 강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한편 국가경제가 세계화되면서 경기운영규칙이 범국가적인 것 (GATT, NAFTA, Maastricht 조약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단일 국가의 재량권과 자율성도 위축되어 주목된다.³¹⁾ 세계화와 함께 단일국가 보다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 범국가적 제도적조치(institutional arrangements)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이같이 개별국가의 설립근거를 앗아가는 이같은 변화와는 달리 세계화와 함께 개별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이 한층 중시되는 상반된 경향도 보여 주목된다. 세계화와 함께 지역경제로 전환되는 것과는 달리 단일국가경제가 한층 중시되는 이같은 상반된 진전상은 결과적으로 향후 경제질서가 단순하게 시장논리나 시장기능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조성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2>에 수록된 1980-90년대의 사회제도상 주요 변화는 경제질서가 이같은 이중적 변화(double shift)로 인해 한층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제도적장치와 조정수준 간의 관계

제도적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조정수준	시 장	네트워크	협 회	정 부
1. 지구	*	** 제3의 이태리	** 길드, 직종	R&D** 교육 및 훈련**
2. 지역	*	** 독일 남부	*	R&D** 교육 및 훈련**
3. 국가	** 포드생산 방식시대	* 미국(1950-70) 네트워크 조성축진	** 노동조합 업자단체	국방** 조세**
4. 주 지역	**	***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비효율적 임	이자율 및 외환율**
5. 세계	**	***	존재할 경우 극히 취약함	무역규제** 이자율 및 외환율**

* 조정이 취약하거나 별로 두드러지지 않음

** 조정이 다소 효과적임

*** 조정이 효과적임

예컨대 금융의 경우 그간의 세계화에 힘입어 범국가적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관리는 계속 단일국가의 대표적 정부기능이며, 자금이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나라마다 더욱 절실하게 되었고, 이와는 달리 개별국가의 이에 대한 재량권은 한층 제한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연합(EU)이 등장하면서 EU 역내 통화시스템이나 환율안정은 당연히 EU 권역내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회원국의 정책수단이던 이자율이나 외환율은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1999년 초부터 EU 권역내에 단일통화 사용이 실현된다면 정책수단으로서 EU 구역내 개별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통화관리에 따른 재량권은 한층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유럽시장이 조성되면 전체영역에 동일한 경쟁규칙이 적용

되어 범국가적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초국가기업(TNCs)이 동반자관계를 강화할 경우 기업간 협조와 경쟁은 범세계적 수준에서의 협조와 경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³²⁾ 더구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세계무역기구(WTO)로 개편되면서 국제수준에서의 교역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는데 이같은 변화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던 법률이나 산업정책에 대한 규제가 한층 증대되었음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의 경제는 적어도 당분간은 해당국의 거시경제정책(macro-economic policies)여하에 계속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단일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마다 정책결정에 따른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변화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도 단일국가보다는 지역수준에서 강구될 경우 한층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R&D 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제마케팅전략, 그리고 조세감면 등에 따른 계획이나 규제도 이제는 지역은행이나 지역 기구에서 주관해야 한층 성과를 거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제조업체들은 이미 특정국가가 아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강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이같은 변화는 여러 모로 시사적이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 업자간 유대를 강화하며, 제품을 정확하게 송달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한층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³³⁾ 1990년초 이래 생산과 연관된 사회시스템(SSP)이 일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독일, 이태리 그리고 일본 등 모두가 밀집된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분석이 일반화될 수 있는 하나의 추세라면, 단일국가구조의 적절성을 회석시키는 이같은 이중적변화(double shift)가 한편으로는 나라마다의 경쟁력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각종 조정메커니즘이 단일국가중심에서 벗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별 경쟁력이 중시된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下에서 특히 교역, 금융,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매개가 되어 기업간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었고 국가간 상호의존성도 더욱 증대되었는데, 그 결과 국가간 경제교류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경제활동에 대한 단일국가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모든 사회시스템이 이같이 계속 연계되어 한층 복잡하게 얹혀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 국내문제라 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투기성자금(hot money, 은행에서 혼히 자산 trading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는 hedge fund, 그리고 junk fund 등)의 유입이나 그 부작용을 어느나라 정부이든 연관된 정부나 국제기구의 도움없이 제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 그같은 대책은 - 예컨대 자국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높은 이자율,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출규제 등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나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³⁴⁾ 새롭게 조성된 다양한 국제적흐름(international forces)으로 인해 한 나라가 자국내 제도개편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사실상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무역과 연관된 국제협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같은 환경변화의 실상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즉 무역에 따른 국제조약은 제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그리고 특히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겠으나 이로 인해 초래되는 영향은 교역 만이 아닌 모든 사회분야에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여 무역협정은 어디까지나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영향은 무역부문만이 아닌 사회복지분야도 포함되는 나라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조정을 일관성있게 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각종 사회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나 장치가 모두 각기 다른 수준과 여건하에서 강구된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금융이나 화폐는 그 속성상 국제화 성향이 강한데 반하여 사회복지는 전적으로 해당국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과제라는 것 등이 그 예다. 그리고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활동과 일체의 규제해제(deregulation)를 요구하지만 일반국민은 오히려 기업활동이나 시장기능으로 빚어지는 모든 부정적 결과를 철저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주장이 각기 다르며, 또 이같은 가운데 조정기구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기 특이한 문화에 뿌리를 둔 이들 조정기구가 생소한 문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되어 조성될 새로운 경쟁력은 지금까지의 경쟁력과 달리 그 내용과 구성도 한층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수준 뿐 아니라 노동관계시스템, 경제변동에 대한 경제주체의 각기 다른 대응, 기업 간 교류의 성격, 그리고 민간기업과 정부당국 간의 관계 등 모두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력은 지금과 달리 한층 복합적인 요소가 기반이 될 것이다. 이같은 와중에서 경제단위가 개별국가가 아닌 지역경제로 전환될 때 기업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서 나라마다의 경쟁력제고는 더더욱 복잡하고 또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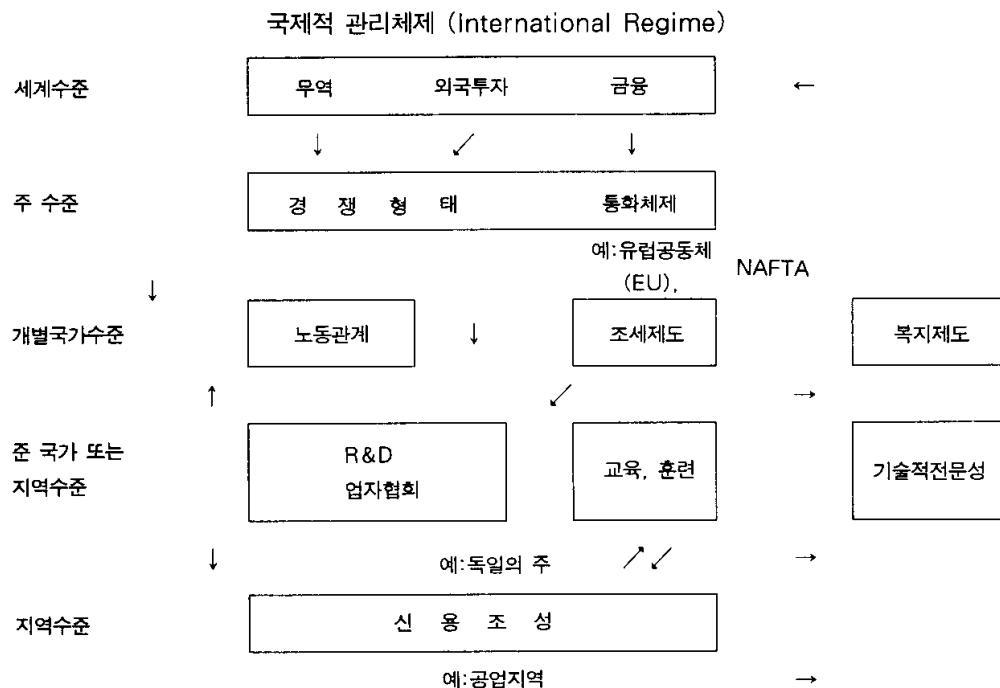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와 달리 나라마다의 제도적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다원적이고 또 지역수준의 장치가 한층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각기 수준에서 한층 조화를 이루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법만이 아니라 쌍무적 협정과 다원적 국제조약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 다원적 규정(multilateral regulation)이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국내법이나 쌍무적 협정보다도 한층 세부적인 면 까지 규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와중에서 통화시스템은 초국가적 특성을 띠게 됨으로써 단일국가의 정책수단이던 통화조절기능이 사실상 실종되어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와 각 기구간의 협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국가의 대표적 정책수단이던 이자율이나 외환율에 대한 통제력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조정력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오히려 증대되었기 때문에 경제주체간의 조정은 한층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그 하나의 예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세계화와 함께 권력과 자원배분을 근거로 조성되는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부구조까지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는 향후의 기업경쟁력은 단순히 기업구조나 개별기업의 경영효율성만이 아니라 정치구조를 포함하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며, 따라서 모든 시스템은 구성요소가 고리가 되어 한층 상호의존적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권력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마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은 과거와 달리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변화는 나라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삼 경제주체 모두가 모든 수준에서 서로 협의,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이같은 협조의 필요성은 향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주체간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이유는 각 경제주체간의 공식적 상호연대가 곧 노동관계, 조세제도, 그리고 각종 복지 서비스의 기반이며, 또 이를 토대로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이 조성되고, 또 이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함께 이들 모든 제도적장치도 불안정한 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제각기 변화를 강요 받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림 1〉 제도적장치의 근거



VI. 市場經濟秩序의 限界

최근들어 사회시스템이 한층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이상의 분석이 시사하듯이 전체 시장경제질서도 계속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모두 시장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 같은 시장원리 중 하나가 바로 시장경제는 불규칙한 수급으로 인해 반드시 경기변동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그의 경기순환론에서 시장경제 하에서의 생산활동은 시장능력이나 수요를 상회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변동을 촉진하게 된다고 말한다.³⁵⁾ 그리고 생산자가 이같이 수요를 외면하고 생산활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들만은 흔히 경기순환과 무관하다는 환상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시장원리가 그들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겪게 된 위기를 수없이

보게 된다. 예컨대, 17세기초 화란이 겪었던 투립꽃 광란(Tulip Mania), 18세기 영국의 남해 거품사건(South Sea Bubbles), 1890년대의 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 그리고 1990년대에 ASEAN 회원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우리가 겪고 있는 주가폭락 등 금융대란은 모두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각에서 비롯된 재앙이기 때문이다. 즉 오늘의 금융대란이 실은 1980년대부터 거품으로 일기 시작한 주식과 지가(地價)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가 우리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차각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³⁶⁾

오늘의 세계경제가 극히 취약하고 또 불안정하다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지도자 중에는 이같은 자본주의의 취약성이나 시장원리가 마치 그들과는 무관한 듯 경기순환을 외면한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므로서 당혹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세계 도처에 계속 누적되는 과잉생산시설과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는 향후 우리 경제에도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업부문마다 세계 도처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과잉생산시설 그리고 특히 이들 시설에서 제품생산이 계속 됨으로써 언젠가는 수급불균형으로 큰 재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일부 회사의 도산이나 특정공장의 폐쇄 등 한정된 재앙이 아니라 지구촌경제(global economy) 모두가 파멸”될 위기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의 경우 세계시장규모(1997년 현재 6,000만의 잠재적고객)를 크게 초과하여 생산시설이 증설되고 있는데 이들 모든 시설에서 자동차생산이 계속될 경우 서기 2000년에는 수백만대의 자동차가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은 이같은 상황이 자동차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화학, 전자, 철강, 조선, 반도체 그리고 항공산업 등 모든 부문에 해당된다는 점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³⁷⁾

수급불균형으로 요약되는 이같은 원천적 부조리가 아직은 원화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극적인 통화가치절하,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해외자본이 일시에 퇴출함으로써 빚어진 금융위기로 이어졌을 뿐이나 이같은 경제혼란의 근원은 다름 아닌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동남아 국가 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지역의 은행이나 투자가들이 실은 목전의 자금대출과 투자활동 그리고 이를 통한 단기적 이윤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투자결과 조성된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그간에는 외면 또는 미처 예전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잉생산시설의 계속되는 증설, 기술혁신,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보다 저렴한 곳으로 생산시설을 이동하거나 생산공정과 시설의 현대화가 계속 추진됨으로써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윤은 더욱 감소되고 있다.

물론 이같이 계속되는 경쟁격화와 이로 인한 이윤차액(profit margin)감소 때문에 세계경제가 곧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같은 과잉생산시설이 세계금융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지 않다는 점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과거의 경험이 앞날을 예측케 하는 하나의 근거라면 수익률이 감소되고 이윤격감이 예상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액을 회수하거나 생산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같은 사태가 단기간에 전개될 경우 세계경제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과잉생산이나 이같은 과잉생산시설의 누적 이외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계속 누적되는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적자다. 지난 해 미국의 연간 총무역수지적자는 2,500억불, 그리고 올해 들어 1월에 이미 250억불을 기록하여 금년의 적자누적총액은 3,0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⁸⁾ 그러나 누적되는 무역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화는 유일한 기축통화(reserve currency)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초국가기업(TNCs)의 모국이 다름 아닌 미국이며 또 이들 TNCs의 내부거래액을 감안할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마치 1990년대초 거품으로 가득찬 주가나 토지가격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인식이 오늘의 경제혼란을 초래한 원인이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더로(Lester Thurow)의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평은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시사한다³⁹⁾:

미국의 달러화는 지불불이행의 위협이 없는 유일한 기축통화일 뿐 아니라, 나라마다 이를 차입하기 원하며, 또 미국내 재산은 누구나 취득하기 원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설명 중 어느 것도 진실을 뒤엎을 수는 없다. 무역수지적자가 계속 누적될 경우 미국도 언젠가 이에 대한 보상능력을 상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종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이같은 재앙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 파급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교역에서 누려오던 혜자를 잃게 되고, 우리도 미국과의 교역량이 격감될 것임은 물론 최근들어 수출입선의 다변화로 급증한 중국과의 교역량도 실종될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VII. 市場機能과 過剩生産

수급에 좌우되는 시장경제는 극히 유동적인 경제질서다. 시장활동을 방지할 경우 재래의 모든 제도적장치는 불규칙한 수급압력으로 인해 기능을 잃게되기 때문에 시장활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특히 시장기능 중 일부를 대체하는 제도적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는 시장의 폭발성을 봉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 장치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규제위주가 되면 시장은 활력을 잃게 되며, 반대로 강제성이나 외부규제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시장은 불규칙한 수급압력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과 같은 시장력을 규제하기 위한 세력간에는 반드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⁴¹⁾ 같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는 물론 정부와 경제주체 모두가 협의하여 강구되어야 하는데, 균형유지여하에 따라 전체사회발전이 좌우되는 것이고 보면 제도적 장치의 조성과 그 운영은 중요하고도 복잡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배경론(embeddedness hypothesis)에서는 자본주의 이전사회의 모든 논리와 관행을 시장경제에 불가결한 기반으로 보고 있다.⁴²⁾ 예컨대 신뢰감·상호성 그리고 장기적 전략 등 모두가 시장기능의 기반이며, 또 이들 요소는 규제를 수반하는 각종 공동체와 조직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조성된다고 한다. 만약 모든 거래에서 규제가 배제되고 오로지 경제주체간 임의계약에 따르게 된다면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되어 시장기능이 마비될 뿐 아니라 시장질서유지에 불가결한 이들 제도도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⁴³⁾ 신뢰, 호혜주의, 그리고 장기적 상호관계 등 시장질서의 기본요소 모두가 실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족벌 등 한결같이 규제가 수반되는 사회구조를 통해 조성 또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⁴⁴⁾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시장의 역동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탄력적인 조정기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들 조정기구가 그 조성초기에는 흔히 시장논리에 밀려 실효성에 도전을 받게되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공동체, 기구 그리고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시스템이 개인의 사리(私利)를 무제한 보장하는 환경하에서는 조성될 수 없고 또 그 기능도 발휘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초기에는 이들 모두가 실효성에 도전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 등 사회기본구성요소의 가격마저 시장기능에 좌우될 경우 그같은 사회는 응집력을 잃어 붕괴될 것이라는 포라니의 주장은 새삼 시사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다.⁴⁵⁾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의 가격과 사회적관계마저 시장기능이 지배할 경우 사회는 응집력을 잃는다는 이같은 주장은 단일국가의 멸망과정을 통해 수없이 입증된 역사적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시장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세계수준에서는 아직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⁶⁾

1930년대에 세계적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계수준에서 경제활동을 조정 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나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다.⁴⁷⁾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과 미국이 두 축이 되어 동서양진영이 대립, 경쟁하고 동시에 이들 두 국가가 각기 권역내 국가의 경제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는 그간 경제적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권이 붕괴되자 사회주의 경제권만이 아니라 비공산권의 결집도 약화되었으며, 미국의 지도력도 크게 훼손되었고, GATT-Bretton Woods 체계에 대한 도전도 증폭되어⁴⁸⁾ 결국 범세계적 지도력이나 이념적유대를 함께하는 리더가 불분명한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이 바로 이같은 과도적 현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⁴⁹⁾ 더로(Thurow)가 주장하듯이 “세계무역질서를 관리하고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자를 규제하는 이가 없다면..... 세계무역질서는 교란 끝에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⁵⁰⁾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정치경제는 1920년대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당시 영국은 세계시스템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으며, 반면에 미국은 세계지도국으로서의 준비가 미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오늘의 세계질서와 그 시스템을 관리할 경제력이나 의지가 없는 듯 하며, 또 1920년대의 경우와 같이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실력자나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가 아직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장기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오던 뉴딜(New Deal) 정책이나 이를 기반으로 조성된 제도적장치를 대체할 새로운 장치조성에 여념이 없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권국가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하여 지금의 모든 시스템이 곧 붕괴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늘의 경제질서가 전환기에 놓여 있고 크게 취약하며, 또 기업인이나 관리자 모두가 현실에 짐작한 근시안적 의사결정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써 오늘의 취약한 경제질서가 한층 효용성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조성될 것인지 가름하기 어렵다는 것만이 분명할 따름이다.

VIII. 맷는 말

급변하는 기업환경 그리고 특히 세계화로 인해 기업경쟁력 그리고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SSP)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개별기업의 효율성 못지 않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배분 등 비경제적요인이 경쟁력을 좌우하며, 국내법 못지 않게 다양한 국제조약과 국제관행도 경제운영규칙(rules of the game)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화와 함께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은 모두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되기보다는 다양한 시스템이 계속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또 이들 시스템이 개별국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사회시스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경쟁력과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에 일고 있는 주요 변화는:

첫째, 나라마다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은 같은 모습으로 수렴되거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통합되리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각기 다른 문화적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또 이같은 시스템이 한동안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같은 시스템은 높은 이자율, 낙후된 테크놀로지,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으로 인한 개도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되어 나라마다 기업활동 특히 국제시장에서의 경쟁활동을 뒷받침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경향은 적어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은 나라마다 주요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세계화와 함께 경제는 교역, 금융, 그리고 테크놀로지 등이 특히 고리가 되어 나라마다 한층 상호의존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 경제운영규칙도 개별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에 더하여 다원적 규정(multilateral regulations)의 준수가 불가결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이 급속하게 붕괴되고 지구촌 경제(global economy)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며, 가장 효율적인 기구나 제도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국가별 거시경제정책(macro-economic policies)의 중요성이 오히려 증대

되는가 하면 국제규정이 경제운영을 크게 제약하는 환경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즉 세계 모든 지역의 요소시장이 세계화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전환되고, 어느 지역이나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며, 또 모든 테크놀로지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것이라던 당초의 기대와 달리 개별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이 국민생활개선에 한층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대되는 교역량, 국제화된 금융, 그리고 계속 발전되는 테크놀로지 등이 고리가 되어 경제는 나라마다 더욱 의존되는 관계를 띠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도 단일국가보다는 지역 그리고 지구촌을 단위로 전개될 때 그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어 지역과 다자간의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이 나라마다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경기운영규칙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현상은 나라마다 거시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 경제문제에 대한 단일국가의 정책수단을 제한하며 특히 정책면에서의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크게 규제하는 상반된 작용을 하게 되어 나라마다 정책강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시스템은 모두가 기준화된 대량생산시스템(SMPS)에서 비롯되므로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패는 생산자의 작업태도나 일에 대한 의욕에 한층 크게 좌우되고 있다. 즉 기준화된 대량생산시스템(SMPS)에 뒤이어 활용되는 주문생산시스템(CP), 다양한 우량품대량생산시스템(DQMP), 유연성있는 다원화된 우수제품대량생산시스템(FDQMP), 그리고 적응력있는 생산시스템(AP) 등 모두가 지금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스템으로 모두가 작업자의 높은 작업의욕을 요구하는 시스템이고,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소비자의 기호가 한층 중시되므로서 제품의 질과 이같은 질을 최종 좌우하는 생산자의 작업의욕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화와 함께 불규칙한 수급을 조정하고 시장의 폭발성을 규제하던 기존의 모든 조정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서 기업은 한층 불확실한 경영환경하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시장경제의 질서유지와 특히 시장의 특성인 불규칙한 수급과 폭발적인 시장력을 규제하던 기존의 각종 제도적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와 경제운영규칙(rules of the game) 그리고 이같은 규칙의 적용을 가름하던 패권국가와 국제기구 등 모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장치, 규칙 그리고 조정기관의 조성은 시급한 오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와중에서 시장규모를 이미 크게 상회하는 생산시설에 더하여 새로운 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기축통화(reserve currency)국인 미국의 대외무역수지적자가 계속 누적증가 하므로서 전체 시장경제는 물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상의 모든 변화는 하나같이 우리경제가 이제 크게 개편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경제가 변화에 부응하여 살아남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자유화 그리고 특히 작업장의 분권화와 민주화 등 일대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편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제주체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최근들어 심화된 세계 경제의 침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점점 고조되는 보호주의장벽, 그리고 크게 상승한 생산비 등 모두가 정부구조는 물론 기업 그리고 사회제도 전반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혁은 물론 생산에 따른 사회시스템이 개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특히 1960년대 초 이래 노동권을 부정하고 추진되어 온 그간의 개발정책이 더 이상 오늘의 개방된 사회환경하에서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보편성의 원리(principle of universality)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그리고 국제적 경기운영규칙에 부합되는 경제활동과 이를 위한 구조개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선 명분과 형식에 치우친 종업원 경영참가제도를 거론하기에 앞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능률제고에 도움이 되는 노동관계시스템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능률과 기본권의 균형을 토대로 안정된 노동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평화를 조성하며, 높은 수준의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동력을 육성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노동단체를 유지하며,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금융제도의 조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혁만이 고품질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이며, 또 이같은 사회조직의 조성이 바로 경쟁력 있는 향후 사회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뜻하는 이같은 생산능력 없이는 시장개척이나 확보된 시장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경제현실이기 때문이다.

Footnotes

1.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와 IMF간에 체결된 구제금융협정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한국의 경제운영과 연관된 일체의 정책결정은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었음. 1997. 12. 4. *한국경제신문* 참조.
2. 정부는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 직후 노사정 위원회를 발족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였으며, 그 첫 성과로 1998 2월 7일 고용조정을 비롯하여 공무원 노조결성권 보장 등 이른바 9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음. 1998. 2. 8. *한국경제신문* 참조.
3. 모든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 노사협의회법(1980년 제정)을 모체로 종업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이 1997년 12월 26일 제정되었음.
4. 백종현, 서창적, 「TQM 품질혁명」 김영사, 서울 1995, 3
5. Robert Roosa는 Texaco, American Express사의 이사, 및 Rockefeller Foundation이사장을 역임한 미국의 유능한 경영인으로서 Hollingsworth에게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Hollingsworth, J. Rogers. 1991. "The Logic of Coordinating American Manufacturing Sectors", Chapter 2 in John C. Campbell, J. Rogers Hollingsworth, and Leon Lindberg, eds., *Governance of the American Economy*, New York: Cambridge Press.
6. 세계적 자동차제조업체인 일본 도요다자동차의 모리다(盛田) 회장은 “미국기업인이 10분을 단위로 기업활동을 전개한다면 일본의 기업인은 10년을 내다보고 기업을 경영한다”고 말하고 있다. 石原慎太郎, “또다시 No라고 말하는 일본”, 1998. 5월 호 「文藝春秋」, p. 95.
7. Arrighi, Giovanni, 1997, "Globalization, State Sovereignty, and the "Endless Accumulation of Capital," Revised version of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tate and Sovereignty in the World Econom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February 21-23., Hobsbawm, Eric. 1994.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 New York: Vintage., Wallerstein, Immanuel. 1995. *After Liberalism*
New York: The New Press.
8. Hollingsworth, J. Rogers. 1994. "Rethinking of the Theory of the Liberal State: Towards a Conception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Permanent Mobilization, and Citizenship," Paper presented befor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ugust 7, 1994, Los Angeles, California.
 9. Clark Kerr, 1960, et al.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the Problems of Labor and Management in Economic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10. Burns, Tom R. and Helena Flam. 1987. *The Shaping of Social Organization*, London and Beverly Hill: Sage Publication.
 11. Roland, Gerard. 1990. *Gorbachev and the Common European Home: The Convergence Debate Revisited*.: Kyklos. 43: 385-409.
 12. Milgrom, Paul, Yingyi Qian and John Roberts. 1991. "Complementarities, Momentum, and the Evolution of Modern Manufacturing,"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 81: 84.
 13. Mathias. 1996. *The First Industrial Nation*, London: MacMillan.
 14. Lazonick, William. 1991.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Myth of the Market Economy*,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Hollingsworth, J. Rogers. 1991. The Logic of Coordinating American Manufacturing Sectors. "Chapter 2 in John C. Campbell, J. Rogers Hollingsworth, and Leon Lindberg, eds., *Governance of the American Economy*, New York: Cambridge Press.
 16. Streeck, Wolfgang. 1991. "On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of 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 pp. 21-61 in Egon Matzner and Wolfgang Streeck, eds. *Beyond Keynesianism: The Socio-Economics of Production and Full Employment*, Aldershot, Hants, England: Edward Elger.

17. Aoki, Masahiko. 1988. *Information, Incentives and Bargaining in the Japanese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Baker, Wayne. 1994. *Netwoking Smart*, New York: McGraw-Hill
19. Pyke, F. and Sengenberger, eds. 1991, *Industrial Districts and Local Regeneration*,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20. Pyke, F., G. Becattini and W. Sengenberger. 1991. *Industrial Districts and Inter-Firm Co-operation in Italy*, Geneva: IL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21. Chandler, Alfred D. 1990.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2. Kim, Lin-su. 1993. 1993. "National System of Industrial Innovation: Dynamics of Capability Building in Korea," In Richard R. Nelson,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3. Kim, Eun-Mee. 1997. *Big Business, Strong State: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4. Chandler, Alfred D. 1977.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5. Hollingsworth, J. Rogers and Wolfgang Streeck. 1994, "Countries and Sectors: Performance, Convergence, and Competitiveness," pp-270-300 in J. Rogers Hollingsworth, Philippe C. Schmitter, and Wolfgang Streeck, eds. *Governing Capitalis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6. Hollingsworth, J. Rogers. 1997, "Continuities and Changes in Social Systems of Production: The Cases of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hapter 9 in J. Rogers Hollingsworth and Robert Boyer, eds.,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New York": Cambrige University Press.

27. General Report on Activities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opa.eu.int/abc/off/indes_en.htm
28. Hollingsworth, J. Rogers, Philippe C Schmitter, and Wolfgang Streeck, eds. 1994. *Governing Capitalis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9. Hollingsworth, J. Rogers. 1994. "Rethinking of the Theory of the Liberal State: Towards a Conception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Permanent Mobilization, and Citizenship." Paper presented befor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ugust 7, 1994, Los Angeles, California.
30.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세계화와 함께 경제와 연관된 의사결정권이 단일국가에서 국제금융기관으로 이전 (shift)되고 있음을 ILO는 실증분석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 ILO, 1997, *1997-98 World Labour Report: Industrial Relations,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1997, Geneva, pp. 10-13.
32. Savenian, Annalee,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33. Hollingsworth, J. Rogers, Philippe C Schmitter, and Wolfgang Streeck, eds. 1994. *Governing Capitalis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4. Hollingsworth, J. Rogers and Robert Boyers, eds. 1997.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5. Schumpeter, Joseph A. 196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6. Thurow Lester, "Asia: The Collapse and the Cure," *The New York Review*, 1998, Jan. 6.

37. Greider, William. 1997. "When Optimism Meets Overcapacity," *New York Times*, 1 October. A 27.
38. *10 reasons to worry about Asia's Economic crisis*. B. Chalmers Johnson, <http://www.usnews.com/usnews/issue/980330/30asiahtmls>
39. Thurow, Lester. 1996. *The Future of Capitalism*,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
40. Schumpeter, Joseph A. 1976.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5th ed., and Thurow Lester, "Asia: The Collapse and the Cure," *The New York Review*, 1998, Jan. 6.
41. Hirsch, Fred. 1977. *Social Limits to Growth*,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42. Hollingsworth, J. Rogers and Robert Boyers, eds. 1997.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 Polanyi, Karl.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work originally published in 1944).
Polanyi-Levitt, Kari, ed. 1990. *The Life and Work of Karl Polanyi: A Celebration*, Montreal: Black Rose Book., Williamson, Oliver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44. Fukuyama, Francis. 1995. *Trust: Social Val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Polanyi-Levitt, Kari, ed. 1990. *The Life and Work of Karl Polanyi: A Celebration*, Montreal: Black Rose Book.
45. Gambetta, Diego. 198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Free Press.
46. Boyer, Robert and J. Rogers Hollingsworth. 1977. "From National Embeddedness to Spatial and Institutional Nestedness" pp. 433-482 in

- J. Rogers Hollingsworth and Robert Boyer, eds.,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 Kindleberger, Charles P. 1978.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is*, New York: Basic Books.
48. 1970년대초 대다수국가에서는 Bretton Woods에 따른 고정환율제가 사실상 변동 환율제로 전환되었다. Epstein G. 1996,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and the Scope for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in Boyer R. et al (eds), *States against Market: The Limits of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1996, p 29.
49. Josef Joffee, 1997, "How America Does it", *Foreign Affairs*, (volume 76. No. 5) pp.13-27
50. Thurow, Lester. 1996. *The Future of Capitalism*,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

Information Sharing and It's Effects on Managerial Efficiency

Young-Ki Park*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empirical literature on the social systems of production - labou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particular - and it's effects upon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 firms.

The paper analyses the repercussions of the opening of national border and increased capital mobility on industrial relations, whilst pointing out that much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on this matter is still far from clear. The paper stresses that the maneuverability of States seems to have been considerably reduced whilst, at the same time, the State is being increasingly called upon everywhere to restore social cohesion which has been seriously undermined by movements of exclusion resulting from market forces. The increasing autonomy of the enterprise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labour relations, as well as the increased role of the enterprise as a spur to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clearly shows the need to pay greater attention to developments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enterprise. Hence, the social systems of productions a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increasingly being regulated by multi-lateral agreements consequenced by the rapid progr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in order for firms in korea to compete effectively at the world market, it has little choices but to make serious efforts to move its economy and the social systems of production toward one organized along more flexible principles.

* Sogang University